

한국의 수자원정책



윤 석 영 | 부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부 / syyoon@kict.re.kr

1. 머리말

최근 우리나라에 수자원정책이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정책이 없을 수는 없다.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질문의 이면에는 정책수립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한 것이라 판단된다. 왜 일까?

우리나라는 수자원 개발을 위해 1910년대 초반 일제 치하에서 본격적인 하천조사가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 약 90여 년간 수자원의 이용과 홍수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일관되게 사업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1990년대 들어 수자원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과 쾌적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국민적 욕구에 대한 시대적 상황을 읽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수자원에 대한 국가의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여 제시하지 못한 단초를 제공한 원인이 되었다.

2000년 6월 영월댐 건설 백지화 이후, 수자원과 하천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과거보다 많이 향상된 현시점에서 오늘날까지 수자원정책에 관한 발자취, 이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전반적인 평가, 그리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수자원정책의 발자취

정책의 발자취는 전문가 그룹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한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독자는 참고문헌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1) 1단계 : 1910년부터 1940년까지 주로 일제 치하의 정책기간

주요 정책은 치수 위주의 하천개수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기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남북한 14개 하천에 대해 하천조사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실시한 성과를 토대로 하천개수계획을 수립하여 1940년까지 치수 위주의 하천개수사업이 수행되었다.

(2) 2단계 : 1941년부터 1965년까지의 25년간으로 치수와 이수를 혼합한 단일목적의 개발 시대

1940년경 2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수력발전, 관개 및 생·공용수 공급 등 이수측면의 수요를 증대시켜 하천을 부분적으로 산업개발에 활용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소도시 및 농지 보호의 치수 중심에서 수력발전, 용수공급 등 산업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본격적으로 하천을 이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구밀도가 낮고 산업규모가 영세해 지역적, 국부적으로 개발되는

단일목적의 수자원 개발사업이 수행되었다.

(3) 3단계 : 1966년부터 1980년까지의 약 15년간
으로 치수와 이수의 균형개발을 도모
하기 위한 유역종합개발과 다목적개발
시대

선진국의 근대 수문분석기법이 본격 도입된 시기
이다.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
산강(섬진강 포함) 등 4대강에 대하여 외국 기술진과
국내 공무원, 기술자들에 의하여 6년간에 걸쳐 수행
한 유역조사사업이라 할 수 있다. 유역조사사업의 성
과는 오늘날까지 유역수자원종합개발 및 관리에 활용
되고 있는 것으로 다목적댐 건설계획 등 치수와 이수
목적의 종합적이고도 장기적인 개발을 수립할 수 있
도록 한 우리나라 수자원발전의 획을 긋는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4단계 : 1981년부터 현재까지로 개별적 수자원
개발 추진기간

1981년부터 4대강 유역종합개발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됨에 따라 부처별 사업의 총괄, 조정, 통
제가 약화되어 소관 부처별로 수자원개발 사업이 추진
되었다. 이 기간에는 전단계 계획에서 추진된 다목적
댐의 완공과 광역상수도 사업의 추진이 주요 성과라
할 수 있다. 1991년부터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맞
추어 부처별로 수자원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3. 수자원정책의 문제점 분석 및 평가

1990년대에 들어와 용수수요의 둔화, 하천수질의
악화, 대규모 홍수 및 가뭄 발생, 국민의 환경적 요구
증대, 신규수원개발의 어려움과 수요관리를 통한 수
자원관리 필요성 등은 앞으로 수자원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수
자원정책의 흐름은 표 1과 같다.

1970년대까지는 초창기 경제개발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주로 이수 위주로,

표 1. 물 관리 정책 변천과정

- 1929 : 부전강댐 완공
- 1937 : 보성강댐 완공
- 1943 : 수풍댐 완공
- 1948 : 내무부 토목국 이수과 설치
- 1957 : 괴산댐 완공
- 1961 : 건설부 수자원국 신설
- 1961 : 하천법 제정, 하천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내용; 치수에 중점
- 1961 : 수도법 제정
- 1962 : 공해방지법 제정, 수질오염관리를 위한 법
적 근거 마련
- 1963 : 상수보호구역 최초 지정
- 1965 : 수자원종합개발10개년계획(1966~1975)
- 1966 : 특정다목적댐법 제정
- 1966 : 하수도법 제정
- 1967 : 한국수자원개발공사(한국수자원공사의 전
신) 설립
- 1967 : 한강유역수질조사 시작, 매년 조사
- 1970 : 4대강 종합개발계획(1971~1981), 수자원
의 다목적 개발
- 1970 : 4대강유역종합개발위원회 → 부처별 사업
의 총괄, 조정, 통제
- 1971 : 하천법 전문개정, 치수 중심의 하천법을 이
수 중심으로 법규 개정
- 1974 : 뚝도하수처리장 건설, 한강홍수통제소 설립
- 1977 : 환경보전법 제정, 수질환경기준 작성
- 1980 : 수자원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1981~2001)
- 1980 : 환경청 신설, 수질오염의 실질적인 관리
시작
- 1982~1986 : 한강종합개발사업
- 1984 : 하천법 개정
- 1987 : 환경오염방지사업단, 환경관리공단 설립
- 1987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정
- 1988 : 호소수질연구소 개설
- 1989 : 맑은 물 공급대책 수립
- 1990 :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
- 1990 : 수자원장기종합계획(1991~2011), 비구조
물계획 포함 ; 관리 및 보전의 중요성 추가

표 1. 물 관리 정책 변천과정(계속)

- 1990 :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 1990 : 환경정책기본법 제정; 수질환경보전법 제정
- 1991 : 낙동강 수질사고
- 1991 : 건설부 관장의 재해대책업무는 내무부로, 공단폐수처리시설업무는 환경처로 이관
- 1993 : 지하수법 제정
- 1994 : 낙동강 패놀오염사고
- 1994 : 수질부분이 환경처로 일원화
- 1994 : 수도법 제2차 개정; 하수도법 제4차 개정
- 1994 :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
- 1995 : 먹는물관리법 제정
- 1997 : 수질개선기획단 구성
- 1997 : IMF 외환위기 발발
- 1997 : 댐저지 국민연대 발족
- 1997 : 물관리 민영화 시작, 광주시가 신설 하수처리장의 위탁경영 입찰 실시
- 1999 : 건설교통부 수자원심의관에서 수자원국으로 개편
- 2000 : 남강 다목적댐 완공
- 2000 : 영월댐 건설 백지화 선언
- 2001 : 하천법에 의한 법정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Water Vision 2020)
- 2004 : 수질개선기획단을 수자원심의관으로 개편

농업용 저수지와 수력발전용 댐이 개발되었고 4대강 유역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하천법 제정(1961년), 건설부 수자원국 신설(1961년), 특정다목적댐법 제정(1966년), 한국수자원공사 설립(1967년) 등의 성과가 있다.

1980년대까지는 이수와 치수 위주로, 대규모 다목적 댐 개발과 광역용수 공급체제의 구축, 하천개수사업이 가속되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상수도 보급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물 사정이 개선되었다. 한강홍수통제소 신설(1974년)과 환경청 승격(1980년), 건설부 상하수도국 신설(1984년) 등이 있었으며 1984년과 1987년에는 대홍수를 경험하였다.

1990대까지는 이수와 치수 이외에도 수자원 환경보전이 추가되어 수계 단위의 수자원 종합관리와 수계별 치수사업 등이 촉진되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수립(1990년)되었고, 환경보전법이 제정(1991년)되었으며 환경청은 환경처(1990년)에서 환경부(1994년)로 연속 승격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자원의 양과 질적인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면서 총체적인 물 문제가 확산되었고 지자체간의 물 분쟁이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1997년 1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수질개선기획단을 설치하여 물 문제에 대처하기에 이르렀다.

2000년대에 들어와 2000년 6월에 영월댐 백지화가 선언되어 수자원에 대한 정책 전환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고, 2004년에는 수질개선기획단이 해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 문제에 시민단체의 개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1960년대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물 관리 정책은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경제개발이라는 개발시대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댐을 건설하여 홍수를 방어하고 홍수기에 물을 저장하여 가뭄에 대비하는 우리나라의 수문학적 특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축으로 고도산업사회를 지향한 정부의 정책은 값싸고 풍부한 용수를 산업과 도시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공급해 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발 성과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가뭄과 홍수가 발생하더라도 대도시 및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심각한 피해는 겪지 않을 정도의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76~'77년, '81~'82년, '87~'88년의 가뭄과 그리고 근래 가장 심각했던 '94~'95년도의 2년 연속 계속된 가뭄에 대해, 일본 동경은 단수와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큰 고통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뭄발생시 가정용수는 물론,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농사를 짓는데 막

대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수자원 이용량의 30% 정도를 전국에 흩어져 있는 댐에 의존하고 있어도 수자원의 계절적,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 수자원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댐에 의한 공급 위주의 수자원정책은 오늘날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의식주 해결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또한 매년 겪는 홍수 재해는 다목적댐과 하천개수를 통해 경감시켰으며, 만성적인 가뭄피해 역시 홍수기의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를 이용하여 해소시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자원개발에 의한 국가의 경제·사회적인 편익이 지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자원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일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시각의 발로는 다음 세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 개념이 제기되면서 개발과 보전에 대한 개념의 제시 및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둘째, 의식주 등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의 성취에 따른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한 차원 향상된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욕구의 고조,

셋째, 영월댐 백지화로 제기된 개발론과 보존론의 대립이 기존 수자원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영월댐 건설에 대한 찬반을 계기로 환경단체를 비롯하여 일부 국민들 사이에 우리나라 수자원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환경단체는 오늘날 수자원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댐 건설에 치우친 공급 위주의 정책을 지적하고 있다. 공급 위주의 정책이 세계적인 고도성장을 이루는데 기여한 점은 인정하면서 물 낭비를 조장하는 개발 위주의 물 관리 정책이 우리 사회를 고비용, 저효율 사회로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의 기본적인 목표를 「수자원의 지속적인 개발로 물부족 문제 해결」로 규정하고 댐 건설 위주의 단조로운 물 관리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기존 물수급 계획은 너무 부정확한 자료와 원시적인 방법으로 용수수요를 추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수수요량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용수수요 추정에 관련되는 모든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정밀한 모형을 적용할 것과 물절약 기기나 기술의 도입, 회귀수의 양 및 재할용률을 고려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수자원개발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리권에 대한 분쟁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수리권은 수자원의 양적인 확보가 중요하다는 각각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국제연합(UN)은 하천유출에 대한 용수이용률을 물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물 스트레스(water stress)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속개발위원회 보고서에서는 40%가 넘을 경우, 지속가능한 개발은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국평균이 40%로 이미 마지막 단계에 와 있음을 진단하고 있으며, 한강유역은 41%, 낙동강유역은 46%, 금강유역은 52%, 영산강유역은 56%, 섬진강 유역은 25%, 형산강 유역 71%, 동진강유역은 85%에 도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건설교통부 등, 1999).

이와 같은 분석을 역으로 해석해 보면,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물 부족에 대한 위기감과 스트레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수자원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40년간 추진되어온 고도성장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주의와 물 스트레스가 계속되는 한 수리권 분쟁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수질문제가 급격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국민들 사이에 수돗물의 불신이 확산되어 가면서 물 관리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문제는 수돗물의 불신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7년 환경오염방지사업단 설립, 1989년 맑은 물 공급대책 수립, 환경청의 환경처 승격, 1990년 상수원수질

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과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 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4년 낙동강 폐놀오염사건이 발생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0년도 중반 이후 1990년대는 수자원에 수질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수자원 문제의 중심에 있는 수질 문제의 원인은 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고도경제성장 정책에 따른 역기능에 의한 결과로 요약할 수 있다. 성장일변도의 정책은 우리에게 의식주는 해결해 주었지만, 수질을 비롯해 환경오염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말았다. 정부에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투자하고 있지만 하천의 오염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물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간 분쟁 및 갈등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일상화된 현상으로 국가간, 지자체간, 상하류 주민들 간에 갈등의 양상이 매우 다양하고 고질화되어 가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부터 1996년까지 발생한 환경분쟁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서 총 59건의 환경분쟁 중에서 물과 관련된 사례가 41건에 이르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은 총 34건 중 30건이 물과 관련되어 있다(건설교통부 등, 1999). 이와 같은 분쟁은 물 관리와 관련된 획기적인 정책개선과 권한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며 더욱 난해해 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수자원정책을 종합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960년대 이후, 국가 주도의 수자원관리정책은 국가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과 가뭄 해소 및 홍수 재해의 경감 측면에서 성공적인 정책으로 매우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
- 국가의 기본 자원인 수자원을 부처별로 분산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이를 통합 조정하는 역할이 미약하였다.
- 1990년대 이후, 지구생태적 문제를 비롯, 환경보

존 등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의 고양 및 참여민주주의의 신장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하였다.

-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제기된 ESSD 개념을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론 및 실질적인 추진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포괄적인 검토가 되지 않았다.
- 1995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물관리 일원화 논쟁에 대해서 야기되었던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논쟁과 수자원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자원기본법 및 부처간 통합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 지역간 물 분쟁이 고질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수리권이 정립되지 않았다.

4. 수자원정책의 방향

21세기에 들어 인류는 개발, 산업화 및 자원의 이용 경향 등의 지속적인 실행 가능성 여부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1972년 세계환경회의, 1992년 리우선언, 2003년 제3차 세계 물포럼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에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려는 논의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구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 수자원 공유를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 오존층의 파괴, 열대우림의 파괴, 습지, 농지 및 회복가능한 자원에 대한 위협 등 인류는 새로운 문제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앞에서 제기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수자원 이용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수자원관리의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천이나 호소의 자연적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활동이 가능하였고 이를 관리하는데 특별한 기술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이해관계자가 많아지게 됨에 따라, 영월댐 백지화, 제천과 영월의 물 분쟁, 춘천시와 수자원공사의 물 분쟁, 대구와 부산의 물 분쟁 사례에

서 보듯이 수자원의 이용과 관리에 대한 갈등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물 분쟁의 주 원인이 되는 이해당사자들의 분쟁 해소와 물과 인간의 삶, 생태계, 경제활동 등 증대된 상호의존도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에 다양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수자원 이용의 다양성이 고려된 관리방안으로 통합수자원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IWRM)를 적용하는 추세에 있고, 하천은 지역단위가 아닌 유역 전체의 다양성이 고려된 유역단위의 관리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수자원을 둘러싸고 있는 제 조건들이 변화된 만큼 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으로 판단된다.

통합수자원관리는 생태계를 손상시키지 않고 공평한 방법으로 경제 및 사회 복지를 최대화하기 위해 토지 및 관련 자원의 개발 및 관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하는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통합”은 각각의 요소를 적절한 비율로 섞어 전체를 형성하

는 “기술이며 과학”이라 할 수 있고, IWRM의 “M”은 “개발과 관리(development and management)” 모두를 의미한다.

통합수자원관리는 합의된 원칙을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실무적인 방법론이라 할 수 있으나, 통합수자원관리의 개념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며, 정형화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각 지역 및 국가 기관은 세계적 및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협력 체계를 활용하여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통합수자원관리에 대한 실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통합수자원관리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통합 관리되어야 할 우리나라 하천유역의 실정이다. 하천유역에 산재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과 분석을 하지 않고는 현실성 있는 통합수자원관리방안은 도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유사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통합수자원관리를 실행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개념 하에 유역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assessment)가 체계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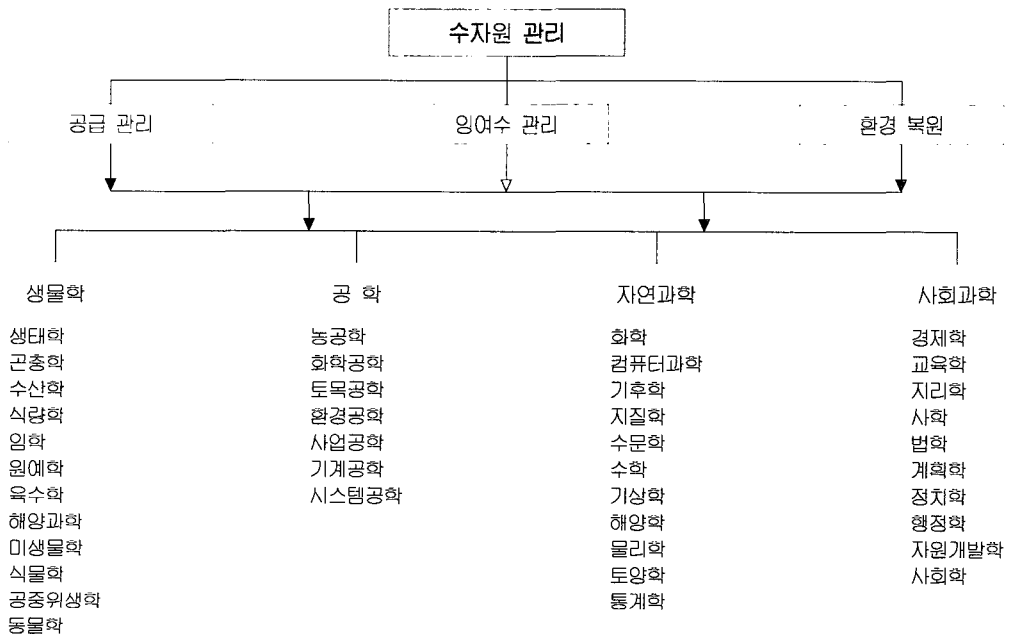


그림 1. 통합수자원관리 구성요소

로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제적인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통합수자원관리에 입각한 성공적인 유역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현실적인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등 유역통합관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통합수자원관리에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제요소들을 조사 분석하여 실행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요소를 인식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합리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생물권의 구조와 기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로서 인간의 활동이 미치는 영향
- 자원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인간 활동 영유에 필요한 여건 조성
-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 물질의 특성과 역효과의 규명
- 오염물질과 오염물질의 영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 오염물질 억제기술의 개발
- 환경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많고 복잡한 상호연관성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연구

5. 맺는말

우리나라 수자원정책의 문제점 분석 및 종합적인 평가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가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에 대해 논해 보았다. 수자원에 대한 현안을 일거에 개선하거나 해소할 수는 없다. 다만 장기적인 전략 하에 쉬운 것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과거 비효율적인 일원화의 소모적 논쟁을 반성하고 부처별 국가 수자원의 분산관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에 대한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낮은 단계의 통합수자원관리체계에서 중국에는 완전한 통합수자원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환경문제의 해결은 선택만이 남아 있다고 한다. 일부 학자는 현재의 생태위기를 맞아, 인간은 급진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즈노미야 후카시는 ‘비약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어 영원히 생존할 수 있는 공업사회 이후의 미래모형을 탐구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미래모형에 관한 연구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 인가 하는 문제보다,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는 해결책은 인간의 가치체계를 되짚어 보고, 우리들의 가치, 우선권, 선택에 의해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1999), 수자원정책·관리개
선방안연구
윤석영(2004), 수자원관리의 새로운 모색,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건설기술정보 통권 247호
윤석영(2003), 우리나라 수자원관리체계의 개선방향, 한

국수자원학회지 제36권 제4호
宇都宮 深志(1993), 개발과 환경의 정치학, 강성철, 홍응우
공역, 대왕사
Larry W. Mays(1996), Water Resources Handbook,
pp.1.29-1.34